



경남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조감도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p>○ 경남도, 실적공사 시 적용대상 공사기준 상향조정</p> <p>○ 경남도,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p> <p>○ 창녕~현풍간 고속국도 확장 및 대합IC 설치 가시화</p> <p>○ 경남도, 8~9월 태풍 복상 대비 대응계획 수립</p> <p>○ 창원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총력'</p> <p>○ 거제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박차</p> <p>○ 양산시, 장기간 미착공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처분</p> <p>○ 함양군,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p> <p>■ 지식정보 9</p>	<p>○ 건설기술력 향상 위해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한다.</p> <p>○ '13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5%상승</p> <p>○ 건설신기술 공사비, "업체가 죄지우지 못해"</p> <p>○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반영</p> <p>○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 건축비 40% 저렴한 신기술 한옥 선보여</p> <p>○ 6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산업 하반기 사업공모</p> <p>○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행복산단으로 조성하여 향후 50년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거듭난다.</p> <p>■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 18</p> <p>■ 신기술 정보 22</p> <p>■ 건설기술심의 현황 23</p> <p>■ 계약심사 현황 23</p> <p>■ 기술인 나눔 정보 24</p>
--	---

경남도, 실적공사 시 적용대상 공사기준 상향조정

▶ 9월 1일부터, 전문공사 50억 원 이상
⇒ 100억원 이상

경남도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적용제도를 침체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적용은 현행 품셈제도에 의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을 보완하고 공사비 산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설계 발주분 공사부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도내 3,000여 전문건설업체의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건설공사 원가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동일한 규모의 공사도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될 경우 종합건설업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전문공사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금년 9월 설계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육성 및 보호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부실시공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경남도,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발 벗고 나선다!

▶ 2011년 “실건축비로 분양가격 정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첫 시도

경상남도는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 및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으나,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하였으며(사건번호 : 2009다97079), 이는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와 실제 투입된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분양전환가격이 과다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이미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승인하도록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실건축비가 얼마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인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실건축비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끌려왔던 실정”이라며,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후 취득세 납부를 위해 시·군에 자진 신고한 자료를 보면 실 건축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는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취득세액 계산서와 회계원장 등의 부속서류를 보면 얼마든지 실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과세 근거자료를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과세자료 제출요청을 통해 경상도나 해당 시·군으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자진 신고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제출받으면 실건축비와 분양전환가격 과다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일부 단지의 소송을 비롯하여 향후 관련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법률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홍준표 지사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당초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이를 방치하는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였다.

경남도는 도시교통국장을 팀장으로 건축과, 세정과, 법무담당관실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분양가격 산정방식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분쟁까지 빈번한 만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적용한 표준건축비를 입주시점에 실건축비로 정산 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하는 방법과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실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도내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157개 단지에 총 57,163세대(5년 임대 47,016세대, 10년 임대 10,147세대)이며, 이 중 133개 단지 49,576세대가 분양전환이 완료되었고 24개 단지 7,587세대는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주)부영주택이 27개 단지 19,507세대로 전체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4개 단지 16,873세대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2

창녕~현풍간 고속국도 확장 및 대합IC 설치 가시화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실시설계비 10억 원 반영 기획재정부 신청

경남도가 「경남 미래 50년 발전전략」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현풍 간도로 확장 및 대합IC설치가 경남도의 적극적인 국비예산 확보 활동으로 2014년도 사업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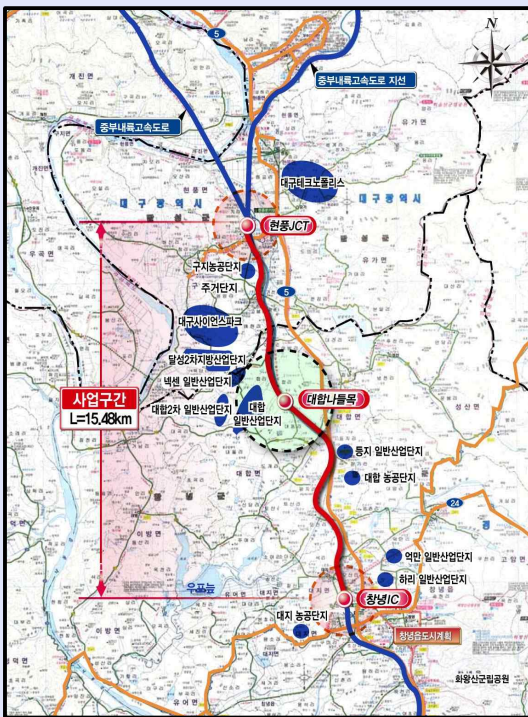
경남도는 2014년도 경남지역 SOC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창녕~현풍 고속국도 6차로 확장(대합IC 설치),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거제~마산 간(국도5호선)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국비 총 1조 9,166억 원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 창녕~현풍 고속국도 6차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역여건, 향후 개발계획, 교통량 변화추이 등의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2014년도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는 경남 창녕군 창녕IC ~ 대구 달성군 현풍JCT 구간 15.5km를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중간지점에 대합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현안사업 이었다.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 및 대합IC는 총사업비 1,475억 원이 투입되며, 2014년 착공하여 2020년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합IC 인근에 위치한 대합1·2차 일반산업단지, 넥센일반산업단지, 대합농공단지 등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의 신규투자가 이어져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남 미래 50년 발전전략」의 조기실현은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포늪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인 2014년도 정부예산에 창녕~현풍간 고속국도 등 경남도가 신청한 SOC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 등에 계속 방문 노력하여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위 치 도>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4

하반기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 적극 추진

▶ 도내 대한 졸업생 채용MOU 체결, 이주 정착금·장학금지원, 지역탐방행사 등 추진

경남도는 주거·교육·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고 있는 진주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는 지난 7월 김시민대교 준공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고, 이전기관 청사 건립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8월 현재 67%의 공정률로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이전기관도 계획대로 공사중에 있어 '14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오는 9월 24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이전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이전기관 신규 인력 채용 시 도내 소재 대학 졸업생 우선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 이전기관이 참여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 촉진과 조기 안착을 위해 하반기부터 지난 6월에 마련한 "이주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 100만원, 동반하는 자녀 중 경남도내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지역탐방 행사도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교육 및 환경여건과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진주 유등축제, 2013 산청세계의약엑스포 및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를 탐방할 예정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지역의 희망은 창조적인 혁신도시로부터”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3 지역희망박람회」와 전국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여 진주혁신도시의 비전과 우수한 투자여건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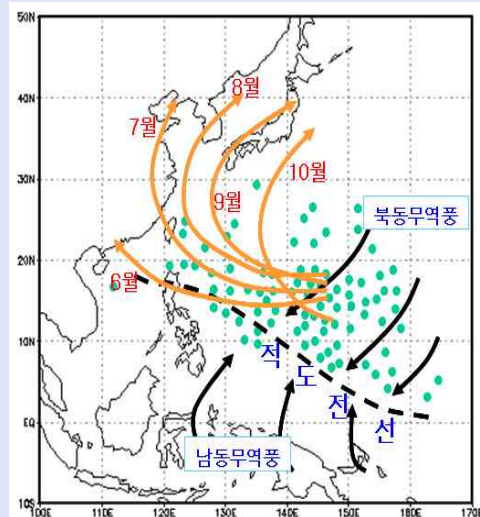
또한 그간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용지(216,518㎡)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기업 수요조사 및 유치업종 선정 등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보완 용역을 8월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권개발본부 지현철 본부장은 경남도는 올 연말이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사 준공과 인근 아파트 742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전지원과제를 완료하여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공공기관이전단 혁신도시개발담당 (055)211-6457

경남도, 8~9월 태풍 복상 대비 대응계획 수립

경남도는 최근 10년간 8~9월에 평균 9.4개의 태풍이 발생, 1.7개가 내습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인명피해가 연 6.2명, 재산피해는 연 2,199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월평균 진로도>

경남도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습 진로 시나리오를 3가지 안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피해복구가 아닌 예방중심의 정책과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18개 시·군,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한다.

이에 따라, 태풍 발생 단계에서부터 사전대비, 비상단계, 복구단계 등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2개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재해위험지구 33개 지구, 급경사지 14개 지구, 서민밀집 6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6개 지구 등 59개 지구의 재해예방 사업장을 수 차례에 걸쳐 점검한 바 있으며, 8월 말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비상근무태세 점검과 단계별 매뉴얼과 대응전략을 즉시 전파하여 태풍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재난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4

창원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총력’

- ▶ 제1부시장, 예타조사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방문
- ▶ 진해야구장 건립사업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비 안전행정부 방문 협의

김석기 창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요청했다.

이날 김 제1부시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황지호 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함께 마산지역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에 최첨단 로봇이 접목되어 산업구조 고도화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원시는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생산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국내 로봇의 28% 생산과 제조로봇 경우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로봇산업분야의 최대 집적지”임을 강조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오는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문회의 의견수렴 후 9월초 기획재정부 중간보고 시 국책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석기 제1부시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문에 앞서 진해 야구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도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제3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비해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110만 자율통합도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진해야구장은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안행부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로봇랜드 사업과 연계,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로봇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사업. 첨단제조로봇 기술개발사업과 로봇전문 부품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로봇기술을 상용화한다. 창원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 자료 : 창원시 기업사랑과
(055)225-4615

거제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박차

거제시는 지난 8월 8일 제8회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개발사업 5건을 심의했다. 5건 중 3건은 통과하고 2건은 유보됐다. 그 중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서,

□ 300만원 반값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학교수)는 본 사업건을 심의하여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첫째 입주자 모집시 임대후 분양과 영구임대 두가지 방안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후 결정, 둘째 아파트 층수 등 개발밀도 하향 조정, 셋째 송정~문동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노선 결정시 사업대상부지가 저촉될 경우 사업부지 제척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부여했다.

거제시의 중요 시책사업인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사업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최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거제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삼성중공업안 기숙사 건립 개발행위허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계획은 (주)삼일기업 외 27개사가 신청한사업으로 기숙사 144세대(864실)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공무원은 “해당사업은 삼성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결, 복지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현장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거제시 양대

조선소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제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본 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게 된 계기로는 거제시 의회의“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거제시에서 법적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거제시 안전행정국 문화공보과
(055)639-3384

양산시, 장기간 미착공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처분

▶ 주택건설사업취소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조치로 각종 개발행위 가능

양산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오던 북부동 245-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장기간 사업 미착공 및 사업시행 불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처분 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범창건설(주)이 지난 2007년 2월경 지상 18~25층 43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자금력 부족 및 시공자 선정 애로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과 기존 주거환경 악화로 원도심 슬럼화가 가중되는 등 최종적으로 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그동안 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신도시 조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사업주체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 하는 등 사업승인 기한을 연장(4차례)하여 사업추진 의지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 국내 20여개 국내 유명 건설회사와 최근 부산소재 경동건설 그리고 롯데건설과 사업분석 등 사업참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이 양산신도시의 분양을 등 주변여건 파악 후 분양성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사업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지정되었던 북부동 일원 22,111㎡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양산시 건축과
(055)392-3051

함양군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등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함양군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별 6~10개소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군 관내 97건의 사업에 27억 7900만원을 투입해 그동안 마을별로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불편사항들을 해소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대표자와 관계자들을 설계조사 및 측량 시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휴천면 태관리 일대 미금선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8월 28일 진관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도로 205호 미금선농어촌도로를 예산 12억원을 들여 도로확포장 670m, 폭 6.5m, 소교량 2기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부합하고,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으로 진관마을 주민의 교통 위험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료 : 함양군 기획관리실
(055)960-5104

건설기술력 향상 위해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한다.

▶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 발표

정부는 건설기술력 증진,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월 2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650억불을 달성하여 수주규모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 비해 내실은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전반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1.2%(‘12년 수주액 8억불)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상징인 “부르즈 할리파” (828m, 세계 최고층 건축물)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에서 설계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 현재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기준 운영 중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을 성능중심으로 전환한다.

건설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하여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한다.

* 사례) 규격중심: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공사
→ 성능중심: 건축벽은 1m당 무게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

② 50개로 산재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하여 코드화한다.

책자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하여 건설기준들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건설기준들을 통폐합하고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한다.

* 설계기준: KDS(Korean Design Standard)로 통합
시공기준: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로 통합

** 코드화 사례) ‘콘크리트구조 건축물 설계기준’ → ‘KDS 311211’로 코드화

③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적·기술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검증하여 신속히 반영한다.

또한, 우리의 강점산업인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한다.

④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9

'13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0.5% 상승

▶ 단가산정 기준도 제정...

실적공사비 더욱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총 1,945항목에 대한 '13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금일(8.5)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 단가는 '13년 상반기 대비 0.6%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0.5%, 건축공사 0.8%, 기계설비 공사는 0.7%씩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여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5% 하락 하였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0.7%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0.6%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 건설공사비지수(노임+재료비) 중 노임지수 2.1%상승, 재료비지수 0.5%하락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31항목 외에 건축 공사의 시멘트물탈 방수 및 기계설비 공사의 강관용접 등 26항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품셈에서 규격이 삭제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종 12항목을 삭제하여 실적공사비 전환항목은 총 1,945항목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공고된 '13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발주청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실적공사비를 축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을 제정('13.8.5)하여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적공사비가 한층 더 현실화 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건설신기술 공사비, “업체가 죄지우지 못해”

- ▶ 건설신기술 품셈마련...
신기술 신뢰성 활용도 향상 기대

【사례】 ○○발주청은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 단가 외에 공사비 반영근거가 없어, 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포기하고 기존의 일반 공법으로 공사를 발주하였다.

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하여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금번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고 14일 공표하였다.

건설신기술은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유효신기술)을 대상으로 '11.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2.3월과 '13.2월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13.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훈령 제 956호)」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신기술 품셈 마련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작용되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표되는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알리마당-공지사항 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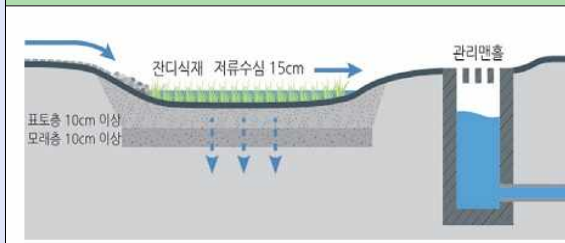
- ▶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빗물정원



- 땅을 오목하게 조성 후 잔디, 나무 등을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한 시설로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켜 홍수방지에 기여
- 또한 빗물 침투와 여과를 통한 수질 개선, 식재를 통한 도시 쾌적성 증진 및 경관 향상에 기여

저류·침투조



-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블록을 사용하여 비교적 많은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주로 땅 밑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빗물유출량을 줄여 홍수방지에 기여
- 또한 침전, 여과 등 물리적 정화과정을 거쳐 빗물을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로 활용 가능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 된다

*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중 시설 융복합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희부지인 우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우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우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 이전의 우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약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

▶ 노후 상가·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12.11.20,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다.

금번에 만든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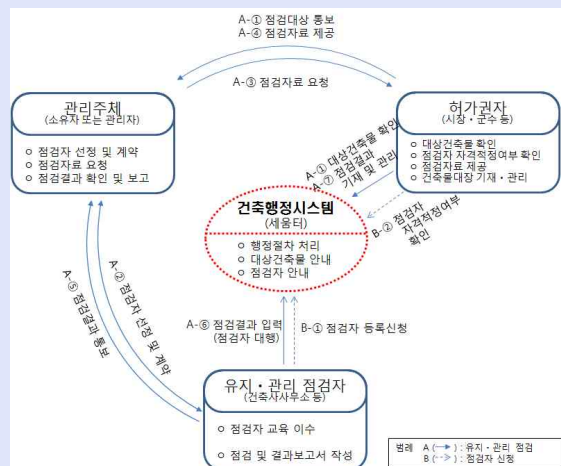
또한 본 매뉴얼에서는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36개 항목→50개 항목)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 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하여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 하였다.

금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 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본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팸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점검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알릴 예정이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절차>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건축비 40% 저렴한 신기술 한옥 선보여

▶ 은평 '시범한옥' 준공...
목재·공사기간 줄이고 단열 뛰어나

한옥은 최근 친환경 주택과 다양한 주거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사람들의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였으나,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비는 2~3배 비싼데다 좁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으로 대중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기술개발 연구(R&D)를 2009년에 착수하였고,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가 이끄는 '한옥기술개발 연구단'은 한옥 대중화를 위해 시공비를 대폭 낮추면서 현대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단열·기밀 성능 등 주거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금번 공개된 '시범한옥'은 은평 한옥마을에 위치한 2층의 도심형 한옥으로 그간 연구 성과를 집약해서 현장에 적용한 중간 성과물이다.

시범한옥은 전통한옥 대비 목재 소요량 40%, 공사기간 30%를 각각 줄이고 초경량신소재 기와 등 현대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비를 전통한옥 대비 60% 수준으로 낮췄다.(3.3㎡당, 685만원)

또한, 대형 집성목을 사용하여 자연 목재의 뒤틀림이나 갈라짐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성능도 확보하였다.

향후 은평 '시범한옥'은 한옥체험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의 연구 성과물은 추후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의 신기술 성과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는 한편, 한옥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저렴하고 살기 좋은 한옥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은평한옥마을내 '시범한옥' 전경>



<시범한옥 화경당(和敬堂) / 2층 평면도>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6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산업 하반기 사업공모

▶ 신규 고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창조경제정책 부합을 위해 지난해에 선정한 경남 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적극육성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2차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특화산업 2차 사업 공모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대적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2차로 공모되는 신규사업의 특징은 기존 5대 지역특화산업(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획되어 산업의 균형발전과 사업추진의 효용성 및 성과창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로 기획된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경남 지역특화산업 상생 생태계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는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는 생산기계산업 친환경·고효율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과 에너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정체되어 있는 기반산업인 생산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은 2015년까지 3년 동안 5개 산업에 총사업비 536억원을 투입하여, 광역권 사업에서 배제된 지역내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부분에 추진하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179억원(국비 125, 도비 54)을 투입하여 5개 산업의 R&D와 비 R&D, 기관거점운영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며, 제1차 공모 결과 확정된 13개 사업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경남도, 경남TP와 대학, 연구기관, 참여업체간 협약체결을 마치고 8월 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제2차 공모는 KIAT 주관으로 8월중에 공고를 거쳐 응모한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9월중에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KIAT 홈페이지에 응모기간,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하게 되며 경남TP, 도내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에서 많은 응모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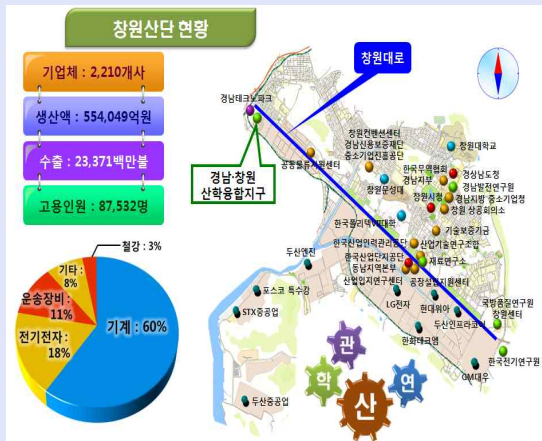
경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총사업비12,912억원을 투자하여 4대 전략산업(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등에 중점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펼쳐

경남 지식기계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86.8%)으로 높이고 4대 전략산업이 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주도한 바 있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창조경제시대에 걸 맞는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되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지원사업 기획과 기업지원으로 경남 제2의 도약을 선도하여 국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지식기계담당
(055)211-2713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행복산단으로 조성하여 향후 50년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거듭난다



경상남도는 넓고 노후화된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거점화, 배움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첨단산업단지화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행복산단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산단은 내년이면 설립 40주년이 되는 국내 최고 노후단지로서 그동안 국내 기계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을 견인

해 왔으나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기반 시설 낙후, R&D 기술개발 대처 부족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신규 근로자 유입 감소와 생산성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져 경쟁력 약화와 중저위 기술 위주의 산단으로 점차 퇴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남도에서는 노후화된 창원산단에 대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산업 전반에 생명력과 활기로 충만한 매력적인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기술, 사람과 문화, 복지가 공존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행복한 일터로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에서 조성계획인 행복산단의 주요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과 R&D·교육, 지식 산업지원센터, 공학해석센터, Well-being Culture 등의 시설을 집적시키는 동남권 최대 융·복합 집적지 조성사업,

▲ 공단 전시장 등 유희부지에 대규모 R&D센터 유치, 스마트워크, 외국인·여성 전용 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도로확충, 도로 및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 배움터 조성사업으로는 창원산단 입주기업 수요에 적합한 도내 대학의 계약학과 개설,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멘토교수 지원 등 선취업 후진학 모델의 산학캠퍼스 운영과, 산학 공동 R&D 추진, 산단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을 접목하는 융·복합기능을 담당할 기업연구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 즐깁터 조성사업으로는 창원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문화복지 촉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상업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복합시설을 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이며, 산단 내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수송체계 지원과 문화공연 관람 등 문화사업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준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발전연구원, 재료연구소, 창원산단 경영자협의회 등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창원산단의 행복산단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상대 유치활동과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조성 계획 자문 및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금년 10월에 결정될 정부 공모사업에 창원산단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 갈 예정이며,

구조고도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창원산단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선도하는 세계최고의 기계산업 클러스터로서 2020년

에는 생산액 130조원, 수출액 470억달러, 고용 12만명, 입주기업 3,1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과학정책담당
(055)211-27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8. 2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90호)
- 예고기간 : 2013. 8. 27. ~ 10. 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입법예고일 : 2013. 8.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80호)
- 예고기간 : 2013. 8. 19. ~ 9. 30.
-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안 제19조의5 제3항제4항 신설)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에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혁신도시에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안 제19조제6항 및 제13항 단서 신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안 제31조제7항 및 제9항제1호, 제32조제10항 및 제13항제1호)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 3342, 3343 팩스: 044-201-5530)

■ 자료 : 법제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3. 8. 2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87호)
- 예고기간 : 2013. 8. 23. ~ 9. 12.
- 개정이유

감리자 지정신청시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고 있던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자기평가서 등)를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감리자 지정서류 제출 간소화 (안 제6조제1항 개정)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는 기술평가 서류(자기평가서)와 감리자지정신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토록 개선

□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 3370, 팩스 044-201-5684)

■ 자료 :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8. 1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58호)
- 예고기간 : 2013. 8. 14. ~ 9. 23.

□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 1)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 2)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관할관청”이라 약칭하도록 함
-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4) 체납처분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특별한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에게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제4항)

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귀속분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관할관청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자료 : 법제처

**무량판 구조의 뿔림전단
성능향상을 위한 나선형
전단보강체 설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옥타곤엔지니어링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08호
-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
철근 가공 및 조립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무량판 구조물의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전단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2방향 슬래브 설계의 새로운 전단 보강근에 관한 것으로 Flat plate slab의 뿔림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기존의 보강체들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한 횡 방향 철근을 이용하여 보강근의 정착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작이 간편하며, 추가적인 공정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경제성,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무량판 건축구조물의 기둥-슬래브 접합부에 횡방향 철근이 용접된 나선형 전단 보강체를 설치하여 슬래브의 뿔림전단 성능을 보강하는 공법

**소로 진입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ANSLE)**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덕산건설(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09호
- 기술분야 : 토목/상하수도/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자체구동력을 갖는 공기압 반전장치로 수지가 함침된 라이너(튜브)를 사용하여 노후된 하수관거를 비굴착 보수하는 기술이며 수지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활성탄탈취장치를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기술로서 소로(폭 2.5m이상)에 진입하여 관경 250mm ~ 800mm에 적용 가능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로(폭 2.5m이상) 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와 활성탄 탈취장치를 이용한 관경 250mm ~ 800mm용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3년 제9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실시설계 적정성 4건
- 심의일자 : 2013. 8. 29.(목)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3-09-01	경상남도 항만어항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조건부 채택
2013-09-02	양산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중) 모니터링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조건부 채택
2013-09-03	산청군 방재분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청군	조건부 채택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3-09-04	실시설계 (적정성)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8km · 사 업 비 : 247억원(공사비 170, 보상비등 77)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거제시	조건부 채택
2013-09-05	실시설계 (적정성)	삼천포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 위 치 : 사천시 사등동 114-1 · 사업내용 : 반응조 덮개, 유입부하 저감시설 등 · 사 업 비 : 172억원(공사비 170, 시운전 2) · 사업기간 : 2013. 12 ~ 2015. 11	사천시	조건부 채택
2013-09-06	실시설계 (적정성)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사업내용 : 내부간선도로 L=3.55km · 사 업 비 : 315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공영반권 경제자유 구역청	조건부 채택
2013-09-07	실시설계 (적정성)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 사업내용 : 내부간선도로 L=5.17km · 사 업 비 : 1,70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공영반권 경제자유 구역청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8월	계	24	22,425	20,983	1,441	6.43%	
	공사	토목	6	14,167	13,113	1,054	7.44%
		건축	4	4,531	4,345	186	4.12%
		기타	4	1,551	1,456	95	6.14%
	용역	4	978	908	70	7.11%	
물품	6	1,198	1,161	37	3.0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미래건축포럼 개최

- 포럼명 :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수요
기술 공급방안
- 일시 : 2013.9.4.(수), 15:30~17:00
-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관 컨퍼런스룸
- 주최/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연자 : 김효원(해외건설협회전문이사)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283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

- 일시 : 2013.9.5.(목), 14:00
- 장소 : 건설회관 2층
- 주최/주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배경 및 목적
 - 주택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제기
 -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생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시장연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2)3441-0600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